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

세종정책브리프

Sejong Policy Brief

No. 2020-02
(2020. 04. 13.)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실현 방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hyunik@sejong.org

차례

Ⅰ. 들어가는 말
Ⅱ.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
Ⅲ. DMZ 활용을 위한 기존 구상과 남북간 합의 경과
Ⅳ.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와 함의
Ⅴ. DMZ 활용의 제약 요인과 정책 시행 접근법
Ⅵ.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방안 및 과제

본 정책브리프는 필자가 지난 세종연구소 제2차 정세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핵심 요약]

1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

❍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뒤, 6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했지만 전반적으로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여왔고 남북관계도 중단되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는 노력으로서 동년 9월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제안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를 다시 강조.

2 DMZ 활용 제약요인

❍ 역대 한국 정부들도 유사한 구상을 제안했지만 문재인 정부처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지는 않았음.

❍ 단지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실현되기는 어려우며 북한 당국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것이 자신들에게도 이득임을 인식하여 한국의 노력에 협력해야 실현될 수 있음.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통한 협력 유도도 필요함. 또한 DMZ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유엔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도 필요함.

3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

❍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지속하면서(키프로스) 중·소규모의 다수 병행 개발 전략도 고려하고(핀란드-러시아) Track II 접근도 병행하며(에콰도르-페루), 한국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도력을 발휘하면서(태국) 특산품 개발도 적극 수행하는(오데르-나이세) 전방위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와 유사한 에콰도르-페루 평화공원 조성 사례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화·생태보전 협력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

음을 보여줌.

❍ 그런데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DMZ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에 유의해야함.

4 접근법

❍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제도적으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조치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동시병행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가 간 평화 및 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추진 방안

❍ 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통일부를 중심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서두르지 말고 우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등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지속 운영하고 발전시키면서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및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정부는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남북공동의 ‘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코로나 19 퇴치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솔잎혹파리병, 임진강 및 북한강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해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함.

❍ 초기 사업으로는 ‘DMZ 신경제 농업지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접경지역 특성상 교류·협력이 불가피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남북 평화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남북 접경(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해 북한과 함께 운영하며, 북한도 내심 원하는 설악산-금강산-원산을 잇는 남북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해 나감. 동시에 UN 등과 협력하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유도해 나간다면 성공 가능성이 열림.

○ UN 산하에‘한반도 DMZ 평화지대화 특별위원회’같은 실무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DMZ 국제지대화 기획추진위원회’를 신설해 세계인의 축제로 주목을 끄는 국제 행사를 기획·주관함.

1. 들어가는 말

○ 2019년 2월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회담이 끝난 뒤, 북·미는 치열한 기싸움을 진행하고 남북관계도 소강상태에 처함.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해 신뢰가 재구축되는 듯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동년 9월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조속히 북·미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어 국제 평화의 큰 업적을 남길 것을 당부한 뒤, 9월 24일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제창하고 DMZ 국제평화지대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제안했음.

○ 북핵문제는 10월 4-5일 스웨덴 북·미 실무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고, 10월 중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을 한국 당국과 합의해 철거하라고 지시해 남북관계도 난관에 봉착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9년 6월 노르웨이 방문 당시 오슬로대 연설에서 남북을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로 지칭하며 접경지역의 화재, 홍수, 산사태, 병충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면서 과거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 체결 후 운영했던 '접경위원회' 설립을 시사했음.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2월 26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것이 새해 통일부의 목표"이고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라면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실태조사, 철도·연결 사업 후속 조치, 관광분야 협력 확대 등을 남북 경색 돌파 카드로 제시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접경지 협력과 체육 교류, 김정은 위원장 남한 답방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도 또 다시 제안함.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은 모든 국경을 봉쇄하고 한국에 확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3월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한국민의 건강을 기원하자 문 대통령도 답장을 보내 남북 정상간 소통이 아직 건재함이 확인되었고, 3월 21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낸 것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알려져 코로나 19가 통제되는 수준에 이르면 조심스럽게 남북 및 북·미관계도 재개될 수 있다는 희망이 싹트고 있음.

○ 특히 현재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데다 북한은 코로나19 유입과 방역 및 확산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대외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음. 동시에 북한은 북·미 및 한·미관계에서 독립된 '우리 민족끼리'의 남북관계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한민족 전체의 건강한 생존을 위해 방역 및 보건협력 도모에 우선적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함. 나아가 정부가 UN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에 대해 호혜적인 관점에서 남북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중단국면을 돌파하는 창의적인 묘책이 될 수도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남북간 DMZ 활용과 관련한 그간의 합의 경과와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를 검토해 함의를 구한 뒤,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실현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과 의미

가.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내용

○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천명한 뒤,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지속가능한 국제평화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음.

○ DMZ는 '국제협약에 의해 군사적 무장이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으로서 국제적 감시체계에 있는 공간'임(, 155). 특히 군사시설 설치나 무기 배치가 금지·제한됨. 한반도의 DMZ는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북한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간 경계에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긋고 이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설정해 형성된 남북으로 폭 4km, 임진강 하구의 정동에서부터 동해안 동호리까지 이르는 길이 248km의 군사 비무장을 약속한 총 907km^2 면적의 지역임.

○ DMZ는 군사 대결이 낳은 비극적인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변모했고, 공동관리구역(JSA), 감시초소(GP),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깃들어있는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되는 등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 되었으므로, 문 대통령은 남북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함.

○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한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을 유치해 평화연구, 군비통제, 신뢰 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국제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DMZ에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한국군 단독으로 제거하려면 15년이나 걸리므로,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DMZ를 국제협력지대로 만들자고 강조함.

○ 이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상응하는 행동으로서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이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되는 방안이라고 설파함.

○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합의했고, 철도·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음을 강조하면서 이는 한반도의 평화 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하고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비전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함.

○ 문 대통령의 연설은 총회 회의장에서 갈채를 받았고, 안토니오 구테헤스 UN 사무총장도 즉각 이 구상을 환영했으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UN군 사령관도 “좋은 제안”이라면서 “지뢰 제거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나.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의 의미

1) 북·미 비핵화 협상 촉진과 북한의 전향적인 협상 태도 유도

○ 문재인 대통령이 이 구상을 UN 무대에서 제안한 것은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수 개월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DMZ를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해 한반도 갈등 완충기능을 강화하고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강화해 북·미 회담 재개와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음.

○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한 것은 이를 잘 보여줌. 즉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를 보이면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역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성의있는 정책을 유도하려는 것임.

○ 또 DMZ 국제평화지대화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상당 부분 해소해주어 비핵화 협상에 보다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사찰과 검증에도 전향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2)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강화

○ 이 구상은 비핵화 협상을 측면 지원할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안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주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DMZ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해 남북간 군사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남북한 모두 상당한 이익을 누림으로써 상호 적대감을 완화하고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동기도 축소시키는 것임.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국제적 외연 확대

○ 2018년 11월 남북이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킨 데 이어 또 다시 남북한이 공동으로 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 성사 가능성이 큼. 설사 성사가 늦어지더라도 남북한의 평화 의지가 한데 모아지고 협력 작업이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추동력을 받을 것임.

○ DMZ에 다양한 국제기구와 평화·생태·환경 관련 국제단체와 연구기관이 들어서고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단체와 기구와의 협력 하에 DMZ 내 지뢰가 제거되는 등 국제사회가 DMZ의 평화지대화에 참여하면,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구축 동력이 국제사회로 확대·강화될 것임.

○ 한반도 정세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상당히 구애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한반도 평화 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 기반을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것임.

4) 한반도 정세 주도력 발휘의 새로운 기반 조성

○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정체·지체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히고 어려움에 부딪친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미국이 제재 완화의 조건으로 북한의 상당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북·미간 신뢰 구축 노력에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즉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세 주도력이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세워 놓은 높은 장벽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임.

○ 이런 맥락에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UN안보리와 미국의 제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추진해 북·미 협상에 좌우되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개선해 나가려 하는 것임.

5) DMZ와 접경지역의 적절한 보존 및 활용을 통한 생태·환경 보

존과 평화 이미지 제고로 남북한의 국가신인도 제고

○ DMZ는 정전협정 뒤 67년간 분단과 갈등 및 대립의 상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생태의 보고가 되었고, 남북간의 분단과 대립 및 적대의 상징으로 철책, 지뢰, GP 등 역사 유산이 남아 있음.

○ 이 중 자연 자원에 대해서는 현상 그대로의 생태 및 천연 환경 보호 관리가 필요하고, 일부 지역은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을 유치하며 생태 및 평화 역사·문화공원으로 만들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또 일부 지역은 남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체육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또 국제사회의 환경과 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생태 보존지역인 DMZ를 잘 보존하고 관리한다면 생태 환경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된 반면 아직 냉전적 이념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DMZ를 국제 평화협력지대로 변화시킨다면, 안보 위협 감소로 사회 안정이 높아지고 남북 접경지역과 한국이 경제적 투자 매력지가 될 것이며 남북한 모두 평화국가로서 국가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3. DMZ 활용을 위한 기존 구상과 남북간 합의 경과

○ 한반도의 비무장지대는 남북한과 UN 및 중국이 전쟁 상태에서 교전을 멈추고 전쟁이 재개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남북한 접경지역에 완충 및 비무장 지대를 설치한 것임. 따라서 이 지역을 평화지대화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려는 구상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남북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 향후에 이 지역을 활용하려 할 때, 그간 한국 정부나 국제기구들이 어떤 제안을 내놓았고, 남북간 또는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 어떤 합의들이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임.

가. 박정희-노태우 정부까지

1)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논의 (1970)

○ 1970년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2) 유엔군 수석대표의 제안 (1971.6.12)

○ 유엔군측 수석대표 로저스 (Feliz H. Rogers) 공군소장이 군사정전위원회 371차 본회의에서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 제안.

○ DMZ 내의 군사시설물을 파괴하고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화' 하자는 것. 갈등의 공간이었던 DMZ를 화해와 펴오하의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 제공(김민혁).

○ 단 정치적 제안의 성격이 강했고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 동년 국토통일원 세미나에서도 DMZ의 국제평화지대(International Peace Zone)화가 제안됨. 이듬해 2월 12일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북한측에 로저스의 제안 수락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통일교육원, 116-117).

3) 국제단체들의 DMZ평화공원 제안 (1979)

○ 세계자연보호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이 1979년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as Environment Program, UNEP)을 통해 DMZ를 세계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계획을 제시함.

○ 남북 양측에 'DMZ 국제 평화자연공원 조성 안 (학술관광용)' 제안. 남북 양측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 요청.

4) 국토통일원장관의 자유관광 공동지역 등 제안 (1982)

○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1982년 2월 1일 성명을 통해 북한 측에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안

○ 실천사업 중 군사시설 완전 철거,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경의선 도로 연결,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역’ 공동 설정, 남북 ‘자유 공동 어획구역’ 설정, DMZ 내 공동경기장 조성, 군비통제, 군사책임자간 직통전화 설치, 판문점을 통한 외국인 자유 왕래 등이 포함됨(곽창규, 6; 통일교육원, 117; 이정훈, 이양주, 2).

5)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의 DMZ 내 ‘민족공원’과 ‘통일운동장’ 건설 제안 (1988. 6. 29)

6) 노태우 대통령의 DMZ 내 평화시 건설 제안 (1988.10.18)

○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을 통해 통일 상징사업을 북한에 제안.

○ 남북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으며, 민족문화관·학술교류센터·상품교역장, 남북연합기구 등을 설치하며 폭 넓게 교류·교환·교역할 수 있는 DMZ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제안.

○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11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자주, 평화, 민주 3원칙에 따라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의하면서 DMZ 내 평화구역 설정 및 평화 통일시로의 발전을 제시함(통일교육원, 116-117).

7) 남북기본합의서 (1991.12.13)

○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내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함. DMZ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남북한이 협의하도록 규정했음.

○ 제19조에서 남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과 해로, 항로 개설을 규정했고, ‘남북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3조2항은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

성 사이 도로를 비롯한 육로 연결을 명시했으며, 10조2항은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 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 한다고 규정해 DMZ의 평화적 이용과 남북한의 통행에 합의했음(정대진, 102-103).

8) 세계자연보존연맹(IUCN)의 DMZ 국제자연공원 조성 제안 (1992)

○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평화공원 조성에 관심을 보임.

○ 냉전 상황이었으므로 상기 구상들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논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최용환, 63-64).

나. 김영삼 대통령 DMZ 자연공원화 제안 (1994.8)

○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민족발전 공동계획’에서 DMZ의 자연공원화를 북측에 제안. 기존의 DMZ의 평화적 이용이 DMZ의 비무장화, DMZ 내에서의 교류 강화 등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과 달리, 생태평화적인 관점에서 DMZ의 활용 방안을 제시.

○ DMZ의 생태적 가치에 주목하여 연구를 지속해온 국내외 연구 기관 및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정책영역에 반영된 결과이자 DMZ 활용의 정책적 선택지가 다변화된 것임. 환경보존과 실리 모두를 실현하려는 노력(김민혁).

다. 김대중 정부

1) 김대중 정부의 ‘생물권보존지역(BR)’ 지정 계획 (1999)

○ 1999년 9월 김대중 정부는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에 따른 ‘생물권보존지역’ 지정 계획을 내놓음.

○ 그 이전까지 정부가 시도했던 DMZ 관련 정책이 ‘직접적인 평화정책’이

었다면, 김영삼 대통령의 제안을 이어받아 자연생태계를 매개로 한 '간접적 평화정책'이었음.

2) 6·15 공동선언 및 관련 남북 합의 (2000)

○ 2000년 6·15 선언 이후 9월 제주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 공사를 위해 DMZ 내 인원, 차량, 기재들의 통행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로 하고 철도 및 도로 주변 남북 관할 지역 설정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하기로 합의.

○ 제12차 유엔사-조선인민군간 장성급회담(2000.11.17)에서 서울-신의주간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DMZ 일부 구역을 개방해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함.

○ 'DMZ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UN군과 조선인민군간 합의서'(2002.9.12)는 "정전협정에 따라 저진-온정리간 철도와 송현리-고성간 도로가 통과하는 군사분계선과 DMZ의 일부구역을 개방해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한다고 합의.

3)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보전지역' 제안 (2001)

○ 2001년 환경인 신년인사회에서 유네스코 지정 '한반도 비무장지대 접경 생물권보전지역(the Korea DMZ TBR)' 계획이 제안됨.

○ 환경부를 중심으로 중앙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전략과 일정까지 마련됨(통일교육원, 117).

라. 노무현 정부

1) 세계유산(World Heritage) 지정 제안 (2004)

○ 유네스코의 '접경생물권보전지역(TBR)'과 함께 '세계 유산' 지정도 제안됨.

○ DMZ일대 자연 문화유산 보전은 물론 남북환경 문화협력을 이끌어내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됨.

○ 종전의 보전계획이 자연환경 보전에 치중한 것과 달리 비로소 인문사회학적 요소들까지 포함한 진일보한 보전대책으로 여겨짐(통일교육원, 117).

2) 환경부의 DMZ 일원 생태계보존대책 (2005)

○ DMZ 내부에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

3) 통일경제특구 구상 (2006)

○ 2000년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되자 접경지역 주민들이 남북 교류를 접경지역 발전의 계기로 인식하기 시작.

○ 특히 개성공단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면서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해 남측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관한 법안이 2006년 2월부터 제출되기 시작함. 이에 지자체들이 나서서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평화시 구상이 동년에 제안됨 (최용환, 64-66)

4) 노무현 대통령의 DMZ 비무장화 제안과 10·4 남북정상선언 (2007.10)

○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자리에서 DMZ에 있는 남북의 소초(GP)와 중화기를 철수하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제안.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거부.

○ 10·4 남북정상선언은 제5항에서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의 조속 완공, 2단계 개발 착수, 문산-봉동 철도화물 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협의·추진을 합의함 (정대진, 103-105).

5) 노무현 대통령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제안 (2007.10)

○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10일 국립생물자원관 개관식에 참석해 추사에서 “남북이 함께 협력해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을 복원하고 DMZ 평화생태공원을 만들어 보존하겠다고 선언(김민혁).

6) 환경부와 문화관광부의 생태·평화·관광 자원 활용계획 (2008)

○ 환경부는 2008년 9월 26일 ‘DMZ 생태·평화 비전’을 선언하면서 2012년까지 ‘DMZ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해 한반도 핵심 생태축인 DMZ를 생태계의 보고로 관리하고 세계평화의 상징지역으로 발전시키는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선언.

○ 동년 문화관광부는 DMZ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중점을 둔 ‘평화·생명지대(Peace Life Zone)’ 정책을 내놓음. DMZ 관광은 1980년대 후반부터 안보관광이 정착되었다가 ‘자연생태 체험관광(철새관광)’, ‘병영체험관광’ 등으로 발전되었는데, 이제 ‘닫혀있는 땅, DMZ’를 따라 숨겨진 생태계와 역사·문화자원을 체험하고 철책선 너머 북녘 땅을 바라보며 평화를 기원하는 매우 특별한 관광이라는 패턴을 만듬(통일교육원, 119).

마. 이명박 정부

1) 통일경제특구를 이은 나들섬 구상과 지자체들 제안

○ 이명박 정부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로서 통일경제특구와 유사한 남북경제협력 구상으로 비무장지대에 속한 한강 하구의 하중도를 보강해 남북경협지구를 조성한다는 ‘나들섬 구상’을 제안함(김민혁).

○ 지자체 차원에서는 인천-개성 연계 발전 구상, 김포-개성 연계 교류·협력단지 구상, 파주시 통일경제특구 구상, 강원도의 설악-금강 연계 구상 등이 제안됨.

○ 그러나 개성공단 자체가 1단계에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북한의 남측 공단 건설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음. 특히 서부 접경지역 북측 파견 노동력이 부족해 통일경제특구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짐(최용환, 64-66).

○ 경기도는 2008년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및 생태관광 개발계획 수립(김민혁).

2) 환경부의 DMZ 생태평화공원 기본계획 (2009)

○ DMZ 내부가 아니라 민간인통제선 이북[1]의 접근가능한 지역에 생태·평화지구를 조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함.

○ 철원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2011년 발표(최용환, 66-67).

3)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방안' (2010)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0년 3월 23일 국무총리실 등 9개 부처와 합동으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방안'을 마련해 발표함.

○ 'DMZ 횡단 자전거길(강화-고성)'과 생태평화공원, 산림휴영치유센터 등을 조성하고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 내의 대성동마을 등 10개 마을을 '체류형 문화관광마을'로 꾸미는 것 등임(통일교육원, 120).

○ 2010년 통일부도 DMZ의 평화적 이용구상 수립.

4) UNESCO 생물권보전지역 신청 (2011)

○ UNESCO에 생물권 보전지역을 신청하면서 그 경계를 남북의 인위적 경계선을 기초로 하고 북한과의 협의 없이 신청함.

---

1) 군사분계선(MDL) 이남 2km에 남방한계선(SLL)이 위치하고 그로부터 8km 이남에 민통선(CCL)이 위치함.

○ 보전지역 지정 시 개발이 제한될 것을 우려한 철원 주민들의 반대로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을 설정하지 못함.

○ 지역주민 의사 및 생태·환경적 고려, 북측과의 협의 결여로 실패(최용환 68-69).

바. 박근혜 대통령의 DMZ 세계평화공원 제창 (2013-2014)

○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9일 미국 의회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설립 구상을 공식 언급했고 2014년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 선언에서 이의 조성을 강조했으며 동년 9월 25일 UN총회 연설을 통해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제안했음(정대진, 108).

○ 일단 DMZ 내부에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새로운 내용.

○ 당시 우리 측이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북한에 운영수익을 제공하며, 제2이산가족면회소 설치할 뿐 아니라 유엔기구 및 세계평화대학을 유치한다는 등의 계획이 추진됨.

○ 북한과 협의가 없었고 남북간 정치·군사 긴장 지속으로 실현되기 어려웠음.

○ 접경지역 지자체들이 지역간 유치 경쟁을 벌였을 뿐 어느 지역이 선정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

○ 지역 활동가 지원이나 소규모 생태·환경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경시됨(최용환, 67-68).

사. 문재인 정부

1)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2018)

○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은 DMZ 일대에서 생태관광, 녹화사업 및 남북 수자원 공동관리 협력 등을 추진하면서 DMZ를 평화적으로 활용할 것을 추구함.

○ 통일부가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평화공원 조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 중(정대진, 108).

2) 판문점선언과 관련 남북 합의 (2018년)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10·4 선언 합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동년 9월 19일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 1조 2항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함. 지상에서는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함. 또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면서 GP 철수(이미 10곳 파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한강 하구 수로 조사, DMZ 내 시범적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진행, DMZ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 관련 군사적 보장대책 협의,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을 규정함(정대진, 105-106).

○ 9·19군사합의서는 남북한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축소시키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남북간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준하는 합의를 이룸으로써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도록 촉진하는 취지를 가진 것.

3)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 회동 (2019.6.30)

4. 해외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사례와 함의

○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성공한 사례들을 검토하는 것이 기초 작업으로 필요함.

가. 해외 사례

1) 독일 녹색띠(Grunes Band)와 오데르-나이세 접경지역 협력

○ 독일은 통일 직전인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접경지역인 철의 장막 즉 죽음의 벨트를 평화벨트로 바꿔 생명선으로 탈바꿈하려는 운동(환경보호를 위한 녹색띠)이 벌어짐(김진영). 이후 생태자원의 보고가 된 동서독간 1,393km, 폭 50-200m 규모의 접경지역을 생태축으로 보전하기 위해 생태환경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이 진행됨. 정찰로, 감시탑 등 냉전시대 역사 유물을 보전해 박물관 등 관광자원으로 사용하고 산책길과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 환경단체인 분트(BUND)가 제안하고 정부가 협력했으며, 지역별로 분트 지부 조직과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실질적인 관리자와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이었음.

○ 녹색띠를 활용해 생태+역사+문화 연계 관광을 촉진. 녹색띠 관광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의 생태·역사적 가치를 널리 경험하게 하여 교육효과와 보전인식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맞춤(곽창규, 12).

○ 이는 2003년부터 냉전기 유럽 국경선 12,500km를 연결하는 유럽그린벨트 사업으로 발전됨.

○ 녹색띠는 세계 주요 접경지역 5곳 중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한국 DMZ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이정훈, 11).

○ 폴란드와 독일간 오데르-나이세 국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독일로서는 부당하다고 여길 것이 분명하지만, 양측 국경지대의 24개 식당이 요식관광 공동개발 네트워크의 회원으로 가입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요리를 개발해 관광지로 발전.

○ UN사와 같은 관할권 조정 상대가 없었고, 유럽통합의 과정이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동하였으며, 통일 후 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차이를 보임.

2) 에콰도르-페루 접경 콘도르산맥 평화공원

○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당시 국경선 획정이 불확실했던 양국은 아마존강 연결지역을 두고 1928-1998년 사이 지속적인 분쟁을 겪다가 1999년 콘도르산맥 접경지역에서 접경평화공원 조성안을 시행함. 비무장 평화공원을 공동 관리하고 이 지역 자유통행을 보장하며 콘도르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협력.

○ 남북한처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공원을 넘어 자원 이용에 대한 공동이익 합의가 전제되어 국경지대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곽창규, 8-9, 14). 즉 합의의 기반은 경제적 공동이익이었음. 에콰도르가 불리한 국경선을 받아들인 것은 물류 이동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아마존강의 항해권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임(서울신문, 2019.7.19).

○ 비정부행위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도 분쟁 해결 워크숍에 참여하여 단계적으로 합의.

○ Track II가 유용함을 보여주었지만 민간 창구가 없는 북한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3) 핀란드-러시아 우정 결연공원

○ 양국 접경에는 냉전기 통행제한지역이 있었고 EU 국경검문소에서 엄격한 통행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완화하고 핀란드의 14개, 러시아의 6개 보호지역을 짝지어 우정공원 또는 결연공원 방식으로 양국이 공동 관리함. EU의 지원으로 양국의 협력기관이 지정되었고, 양국간 연구 협력과 교류 워크숍의 거점으로 이 지역을 활용.

○ 대규모 단일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다수 역사·평

화공원을 개발해 모범적인 생태 보전과 역사·문화 유산 관람지 및 연구 협력과 교육 관광지로 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4) 태국-캄보디아-라오스의 에메랄드 삼각 산림보호지역

○ 3국은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국경분쟁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국제열대목재기구에 의한 에메랄드 삼각지역 프로젝트를 지속해 3국간 기술적 협력 차원의 환경협력을 유지함.

○ 지역 강국인 태국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과 안정된 국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환경협력 사업을 견인해 3국 협의회를 만들고 2004년부터 202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로드맵을 구상해 시행하고 있음.

○ 남북간에도 적합한 역량을 가진 한국이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DMZ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이상 정대진, 111-115).

5) 키프로스 그린라인

○ 키프로스는 1964년 그린라인이 DMZ로 설치되어 남북으로 분단되었는데, 2008년 수도인 니코시아에서 그린라인이 철거됨.

○ 남북 니코시아 시장이 1978년부터 하수처리 사업에 합의해 비정치적인 협력의 문을 연 뒤, 저어새·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보호, 접경지역 병충해 방제 등 작은 소통을 지속하며 신뢰를 지속한 결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단계로 진입(서울신문, 2019.7.19).

나. 해외 사례의 한반도에의 시사점

○ 대규모 개발만이 아니라 소통과 신뢰를 지속하면서(키프로스) 중·소규모의 다수 병행 개발 전략도 고려하고(핀란드-러시아) Track Ⅱ 접근도 병행하며(에콰도르-페루), 한국이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주도력을 발휘하면서(태국 사례) 특산품 개발도 적극 수행하는(오데르-나이세) 전방위

적인 태도와 의지를 가지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음(정대진, 116).

○ 에콰도르-페루 사례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평화·생태보전 협력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곽창규, 14). 단 최근 북한이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민족의 아픔을 담고 있는 DMZ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 것에 유의해야함.

○ 특히 한반도에서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열정이 기본 요건이고,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며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제점과 위협요소를 인식할 뿐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보여 결국 남북한간 협력 의지와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실상 미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 주한UN사령부와의 원활한 조정도 필요함.

5. DMZ 활용의 제약 요인과 정책 시행 접근법

○ DMZ 국제평화지대를 구축하려면 남북간에 위치한 DMZ 활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다양한 요소와 제약들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함.

○ 그 다음 정부는 이를 실현할 추진 계획과 체제를 구비하고 국내외 여러 주체들이 기꺼이 지지할 수 있는 분야와 사업들로부터 시작하며 호혜적인 이득을 얻는 다양한 사업들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면서 UN 등 국제사회의 호응 하에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지대를 구현해야 함.

가. DMZ 활용에 대한 제약 및 고려사항

○ 생태 보고라는 DMZ의 특성과 이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이익을 일정 수준 배려해야 함.

○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DMZ는 국제법이 적용되는 지역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도 국

제법의 규율 대상(정대진, 99)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1) 생태계와 환경 보전 그리고 주민들의 개발 요구 균형적 고려

○ 현재 접경지역이 군사적인 이유 뿐 아니라 환경 및 식수원 보호 등 중첩적인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큼.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60여년간 지역발전의 기회를 접고 국방의 최일선에서 희생해 옴. 과거 서독에서는 접경지역의 낙후가 분단에서 왔다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해 통일 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했음(김범수).

○ 이를 고려하면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돕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필요하지만,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의 특성과 역사·문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 개발에만 중점을 두기는 어려울 것임. 더구나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DMZ의 생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자연보호 측면을 중시하므로 현재의 DMZ의 비전은 오히려 보존에 중점을 두어 수립됨(이정훈, 20).

○ 따라서 주민들의 불이익 축소와 개발 요구 등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계획에 반영하되 생태와 환경 및 문화 유산 보호도 균형적으로 고려한 DMZ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최용환, 73). 이런 맥락에서 2019년 11월 14일 국회에서 개정된 생물다양성법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전환했으므로, 이를 적절히 시행해 DMZ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시켜야 함(황은주, 뉴스매거진21, 2020.1.15).

○ DMZ와 달리 DMZ 이남 민통선까지의 8km 통제보호지역과 그 이남 15km의 제한보호구역, 그리고 그 이남 10km의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 조치가 강구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임(김범수).

2) 주체별·사업별 유기적인 연대 필요

○ 접경지역 현안을 고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및 유기적 연계를 이루어야 함. 중앙 정부는 부처별로 계획을 입안하고 이를

상호 조율하여 종합 계획을 만들며, 지자체들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지자체들간 그리고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소통 필요.

3) 주한 UN사령부와의 협의 필요

○ 한반도의 DMZ는 1953년 7월 27일 UN군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구속되는데, 이 협정은 군사정전위원회(MA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가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50년 7월 7일 UN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84호는 미국의 책임아래 UN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하고 미국 대통령이 사령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했으며,[2] 정전협정은 UN군사령관에게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선임하는 권한을 부여했음. 또 정전협정 10항은 DMZ 내 군사분계선 이남부분에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UN군총사령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2000년 11월 16일 UN사는 북한과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고 합의하고, 다음날 'DMZ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UN군과 조선인민군간의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관리권(administration)'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UN사가 DMZ 전체에 대한 '관할권'은 보유하면서 일부 구역만을 지정해 남북한이 '행정권'을 공동 행사한다는 입장을 취했음. 이후에도 UN사는 남북한 인원은 물론이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군사분계선 통과마저 자기들의 승인사항이라고 주장했음.

○ 이에 따라 남북한 간 DMZ 협력은 UN사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한계를 가짐(이상 박영민, 156-160).

○ 단 현재 주한유엔사는 유엔의 활동단체나 기구가 아님. 유엔의 지휘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직임. 따라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에는 허가권이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어 환경 및 문화재 조사, 감시초소 방문 등 비군사적 성질에 대한 허가권의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

2) 1950년 10월 7일 UN 총회는 38선 이북 수복 가능성이 제기되자 북한지역 점령통치권을 UN사령관에게 부여한다고 결의했음. 단지 한국은 1954년 11월 7일 UN사로부터 행정권만을 이양받음. 박영민, pp. 158-159.

고 밝힘(박성진, 경향신문, 2020.2.4).

4) 북한과의 협의 필요

○ 남북한이 호혜적인 경협을 위해 DMZ가 가져온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상호 교류의 통로로 이용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철도·도로 연결과 일부 지뢰 및 GP 철거, 유해 발굴만 시도했을 뿐임.

○ 현재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 발굴사업도 한국군만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북측의 적극적인 호응과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격적인 DMZ 활용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물밑에서라도 북한과의 협의를 거친 뒤 발표되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임.

○ 그런데 현재 북한은 '선 북·미관계 후 남북관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군부는 반대할 것이며 여타 당 간부들도 안보저해 요인으로 여길 수 있음(안제노·이수석, 3).

○ 따라서 접경 상대측인 북한의 입장과 요구가 고려되어야 하고(최용환, 73), 특히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며 공동 개발을 통해 호혜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임(안제노·이수석, 3).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남한 자본과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이라는 기존 공식을 넘어서서 첨단사업 교류도 병행해야 함(최용환, 74).

○ 현재 북한이 코로라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일체의 대외교류를 중단하고 있으므로 남북간 방역 및 보건 협력을 시도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통제되는 과정을 잘 넘겨야 할 것임.

○ 과거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처럼 단절형 폐쇄형 경제특구 방식보다 남북간, 지역간 산업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향해야 함(최용환, 73-74).

○ 또한 북·미간 비핵화 합의의 진전과 남북간의 불신 해소와 관계 진전도 요망됨.

5) 대륙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구상 필요

○ DMZ와 북한 너머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대륙이 있음. 남북간 교통·물류 인프라가 연결되는 것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넘어 대륙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남북 간 단절을 넘어 교류·협력의 폭과 깊이가 대륙까지 확대되면 사업 추진이 더 큰 탄력을 받을 것이고 효과도 훨씬 클 것이며 추후 사업 방향을 시정할 필요도 없을 것임.

○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등의 전략을 두루 고려해 남북 교류 사업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함(최용환, 72-73).

나. 한반도 DMZ의 특수성과 DMZ 활용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 한반도 DMZ는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 방지를 위해 항구적인 국경을 구축하려는 일반적인 DMZ와 달리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분단국가 내의 '잠정적인 접경'이므로 정치·군사적인 대립이 매우 첨예한 곳임. 또 보통 접경지역의 갈등과 대립의 주원인이 자원과 영토선 분쟁인 반면 한반도 DMZ는 '체제와 이념 갈등의 결과물'이므로 DMZ의 성격과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려면 정치적인 갈등 조정이나 문제 해결, 남북관계 자체의 변화가 전제되는 것이 순리임(박은진).

○ 그간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에서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국가간 평화 및 통합 달성이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계를 드러냈음(정대진, 102).

○ 따라서 제도적으로 국가들을 구속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조치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을 동시병행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국가간 평화 및 통합에 효과적이라는 신기능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정대진, 101).

6. DMZ 국제평화지대 추진 방안 및 과제

○ 현재 북한이 한국 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을 비판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남북 협력 사업이 진척되기는 어려움.

○ 이는 다분히 유엔안보리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이 진전되기 어렵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선 북·미간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실무회담을 거쳐 정상회담 개최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향후에 북·미 실무회담이 재개되어 협상에 진전을 이루고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도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척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부는 국제 대북 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들을 우선 추진하면서 북·미관계가 진전될 경우 급속도로 전개될 남북 협력 사업들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함.

○ 우선 DMZ 일원 생태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 우수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 매수, 생물 서식에 중요한 농지에 대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을 시행함(이정훈, 이양주, 9).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또는 경기도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DMZ 평화·생태연구소’ 설치를 추진함(이정훈, 이양주, 23)

○ 또 한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DMZ의 분단·전쟁유산 및 문화유산 발굴 및 보전 사업으로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공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DMZ 에코뮤지엄’과 ‘기억의 박물관’ 설립을 검토(이정훈, 이양주, 10-12).

○ 조금 더 발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DMZ를 그간의 통로의 개념으로 본 데서 진전해 중심으로서의 DMZ를 남북 교류 및 협력의 장, 그리고 더 나아가 남북 통일의 핵심장소로 재창조한다면 좋을 것임(김창환, 123).

○ 이런 맥락에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도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요망됨.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협상을 추진했거나

합의한 사항과 9·19 군사합의서 등은 북한이 대체로 여전히 존중하고 있으므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모색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정진해야 함.

○ 이런 맥락에서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 실현을 향한 다양한 추진 방안들을 검토함.

가.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 추진체계 구축

○ DMZ의 평화적 이용 종합계획의 목표로 “DMZ, 국민·북한·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시작”을 핵심개념으로 설정하고, ‘국민을 위한 평화 실현’ 및 ‘지속가능한 평화·생태 벨트 구축’을 세부 목표로 추구함.

○ 추진 체계로는 통일부가 민간단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영역별 협의체계를 마련하면서 국내 사업을 총괄·조정하고 대북협의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함.

- 국책연구기관 및 민간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민간자문단 구성.
-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운영.
- 남북 간 ‘접경지역 공동위원회’ 운영.
- 국제적으로는 UN과 환경·문화유산 등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 NGO들과의 협력을 확대.

※ 2020년 2월 통일부가 기존의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3국 체제에서 3실·2국 체제로 개편하여 교류협력실이 신설되고 그 산하에 역시 신설되는 남북접경협력과가 DMZ 남북공동실태조사,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 DMZ 지뢰 협력제거 등 이른바 DMZ 평화경제 업무를 맡게 됨(연합뉴스, 2020.2.4).

○ 통일부는 2019년 8월에 이어 11월 28일 제2회 DMZ 평화협력 국제포럼(DMZ Global Forum)을 개최하면서 “이 국제포럼'을 정례화해 DMZ에 대한 국내외 이해도를 높이고, DMZ를 국제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힘.

○ 경기도가 경기평화재단 설립을 검토 중이므로 강원도도 대칭 재단을 설립해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나. 이미 시행 중인 사업들을 지속 운영하고 발전시킴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등)

○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사업이자 DMZ 세계평화공원의 초기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43억여원을 들여 만든 ‘DMZ 평화의 길’들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함.

- 2019년 4월 개방된 고성 DMZ 평화의 둘레길(일반전초인 GOP 철책 이남: 통일전망대-금강산전망대 A,B코스), 철원 둘레길 (백마고지 전적비-화살머리고지 GP), 파주 둘레길(임진각-도라산전망대 GP)과 양구 DMZ 펀치볼 둘레길(평화의 숲길, 오유밭길, 먼 멧재길, 만대벌판길) 등 DMZ 둘레길.
- 2018년 12월 행정안전부가 2022년까지 286억원을 들여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을 추진한다고 발표: 강화에서 고성까지 걸어서 한반도 동서 456㎞를 횡단하는 ‘한국의 산티아고 길’ 조성 사업.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500억원의 경제 효과 창출. 문 대통령이 2019년 10월 23일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와의 정상회담에서 “DMZ가 스페인의 산티아고의 길처럼 평화의 길이 되어 세계인이 함께 걷게 되길 기대한다”며 의지 과시(한겨레, 2019.11.2).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DMZ에 많은 지뢰가 묻혀있으므로 휴전 이후 국군 장병들이 매일 순찰해온 ‘냉전의 길(장병 순찰로)’을 ‘DMZ 트레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이라고 주장(한겨레, 2019.6.17).
- 경기도가 2019년 4월 파주 통일동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자 파주시는 통일동산과 인접한 한강지역에 오두산 평화·생태 철책 탐방로를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4월 1일 한국군이 일단 단독으로 시작한 철원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사업을 지속하면서 북한이 참여해 공동 유해발굴이 되도록 설득함. 또 이 사업을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DMZ 국제평화지대 사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유도함.

○ 판문점 JSA의 비무장화는 이미 달성했고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 땅을 밟았으므로 이 구역에서 관광객들의 자유

왕래를 실현시킴.

○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의 DMZ 인근 군사훈련 및 비행 금지 및 상대방 비방·자극행위 금지를 상호적으로 계속 준수하도록 잘 관리해야 함.

○ 남북 공동 한강하구 평화적 활용

- 9·19남북군사합의서에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 강구에 합의한 이후 공동조사단 조사 후 2019년 1월 30일 제작된 해도를 북측에 전달했음.
- 단기적으로 한강 하구 포구 복원, 뱃길 확보 및 유람선 시범 운영, 한강·임진강 통한 관광루트 개발.
- 중장기적으로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남북 연결 철도·도로 등 구상 추진(이정훈, 이양주, 16).

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보건·의료 협력 통해 남북관계 재개

○ 중단된 남북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인도주의적인 지원과 코로나19 방역 및 퇴치를 위한 보건·의료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라. 접경지역 특성상 교류·협력이 불가피한 분야 협력 사업 우선 추진

○ 북한에 의료 및 전염병 대비나 방역이 매우 필요하지만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는 상황임. 한국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말라리아, 산림병충해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음.

○ 특히 현재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정황상 국가 총력을 기울여 이에 대처하고 있고 사실상 상당 수의 확진자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부는 바로 코로나 19 퇴치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고 남북 공동의 ‘보건의료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코로나 19 퇴치 뿐 아니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솔잎혹파리병, 임진강 및 북한강의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해 가면서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함(조한범,

2020).

○ 따라서 코로나19 퇴치와 전염병 질병에 대한 사전 공동대처를 위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DMZ 지역에 공동 연구센터 및 방역센터 등을 설립하여 남북간 연구와 백신 개발 및 방역 협력을 신속히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므로 협력에 응할 가능성이 큼.

○ 또 남북한 주민 간 갈등 소지가 있는 공동수계에서의 수량 배분, 홍수 방지 등에 대한 남북 합의와 공동 대처도 중요함.

마. 초기 사업으로 'DMZ 신경제 농업지구' 공동 운영

○ 철원·평강지역 DMZ에 평화농업교류센터(수리시설 등)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역내 북한지역인 평강고원 일원의 농업을 개선하고 자립적 기반을 확립시켜줌.

○ 남한에는 철원 주민들에 의한 농토 경작 및 일부 수입원을 활용한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위한 남북 접경지역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남북간 상호 발전적인 농업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김창환, 124).

○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강원도농업기술원의 접경분소를 DMZ 인근 지역에 설립하고 북한 연구자도 참여시켜 연구와 대북지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 협력함(이정훈, 이양주, 24).

○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남북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휴전협장 장소인 판문점 등을 남북한 교류가 가능한 시범 커뮤니티로 활용(이정훈, 이양주, 14).

바. 남북 평화의 지속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박영민, 166-168)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2월 남북기본합의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서에서 세 번째로 구성·운영이 합의됨.

○ 2018년 9·19군사합의서 제1조1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합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함.

○ 따라서 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과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실현을 위한 보장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정부는 DMZ에 대한 UN사의 관할권을 존중하되, DMZ 평화지대화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현재 UN사와 북한간의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을 이전받아 포괄적인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렇게 되면 남북한이 정전체제의 상당 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평화체제 전환과정에서 남한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고 남북한의 직접협상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임.

사. ‘남북 접경(관리)위원회’ 설치 제안 및 운영

○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동서독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1973년 동서독 관계 중앙부처와 서독의 접경 4개주 대표로 구성된 ‘접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한 경험을(곽창규, 11) 살려 정부가 남북한 관계 중앙부처와 경기도 및 강원도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한 접경(관리)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운영함.

○ 서독 정부가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세제 혜택, 공공사업 우선 발주, 기반시설 개발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구동독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동독건설(Aufbau Ost)’ 정책 사업을 추진해 통일을 대비하고 접경지역을 지원했듯이 (곽창규, 11) 우리 정부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북한건설(Aufbau Nord)’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 설악산-금강산-원산을 잇는 남북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찰 중 남측 당국과 합의해 낡은 남측 시설들을 걷어내라고 지시해 11년째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대 전환점을 맞음.

○ 북한 당국은 공동점검단의 방문 및 실무회담 개최에 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시설 철거를 위한 문서 합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면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북한 측에 남측 시설을 상징적인 소액으로 임대해주어 현대 아산과 한국관광공사 등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인정받고 개별관광을 실시하며(양무진), 남북한에 온 관광객들의 상대측 지역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검토하여 제안하고 시행함.

○ 금강산 관광이 남북간 현안이 되었으므로 향후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된 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낮은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합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설악산-금강산-마식령스키장-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잇는 동해관광공동특구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통일부 등 정부도 이를 대비해 남북협력 사업들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재 면제 절차를 사전에 받아두고 남북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순서를 바꾸어 추진하고 있음(김연철 장관 인터뷰, 한겨레, 2019.11.6).

자. 시범적인 남북 교류 커뮤니티 조성과 남북한 호시무역 추진

○ 군사분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남북 마을인 대성동과 기정동, 휴전협장 장소인 판문점 등을 남북한 교류가 가능한 시범 커뮤니티로 활용(이정훈, 이양주, 14).

○ 나아가 중국의 변경 무역제도에서 함의를 얻어 남북 휴전선 15-20km 이내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필품 위주로 교역하는 호시무역을 도입하고 남북 기업 간 상품과 노무인력,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 거래를 추진하며, DMZ에 제3국 국민과 기업의 진입도 허용하는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을 추진(이수행 외, 89-91).

차. UN 등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추진

○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국제평화 증진 사업으로서 UN의 권능과 역할에 적극 부합하는 과제임.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 연설에서 이를 제안하고 UN 사무총장의 지지와 회원국들의 갈채를 받았던 것임. 따라서 일단 국제 협력 차원에서 UN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먼저 UN 총회와 UN 안보리의 결의 등을 통한 DMZ 평화지대화에 대한 지지를 도출하고 UN 산하에 '한반도 DMZ 평화지대화 특별위원회' 같은 실무기구 구성을 고려할 수 있음.

○ DMZ 일부지역을 평화시로 지정하고 여기에 생태, 환경 보호, 평화유지, 군비통제, 신뢰 구축 등을 연구하고 협력하는 국제 및 국내 기구와 기관을 유치하는 한편 북측 지역 재원, 시설, 설비를 제공할 용의를 표명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DMZ의 평화지대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음(안제노·이수석, 3-4). 기존 기구가 어려우면 'DMZ 평화·생태 협력기구'를 창설해 설치할 수도 있음.

○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생태 및 환경 보호 차원에서 북한을 설득해 '생태계 영구 보존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와 안보 우려 해소를 잘 활용해야 함(안제노·이수석, 3).

○ DMZ 내 지뢰 제거는 DMZ 내 생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유해 발굴, 문화유적 발굴, 생태·환경·문화 평화공원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급한 지역부터 시작해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

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함.

○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DMZ 종합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도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남북공동등재지원 특별법’을 제정함. 적절한 기회에 이를 위한 남북 협력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노력해 이를 성사시킨 뒤,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조한범, 3, 2019). 등재를 추진하면서 예상 후보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설득을 전개해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유산은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선정하는 3대 보호지역 중 하나임.
- 2019년 6월 19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
- 환경부는 경기도 파주와 협의해 비무장지대에 접한 지자체 전체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금강산(2018년)과 설악산(1982년)을 연결하는 비무장지대 일대를 먼저 추진하고 이후 비무장지대 전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고려하고 있음.
- 2019년 7월 11일 이재명 경기도 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문화재청은 대북 협의 주관,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실무협의체 구성, 세계유산 필수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찾기 위한 학술연구 주관,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잠정 목록 등재·신청, 등재 추진과정 주관 등의 역할을 맡고, 경기도와 강원도는 DMZ 기초 문헌·실태 조사, 학술연구 지원, 등재신청서 작성, 북측 참여 및 성과 도출을 위한 협력 등을 맡기로 함.
- 세계유산을 목표로 하되 국내법적으로는 우리 측 민통선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발점을 조성하며 남북 협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함(이정훈, 이양주, 7 & 14-15).

카.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 유도 (조한범, 4, 2019)

○ DMZ 국제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응과 협력을 유도하려면 정부 내에 추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기획과 설계도를 제시하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외국관광객 다수가 DMZ 방문을 희망하는 등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다가 평화와 생태에 대한 성찰과 기억의 장소이자 공동 번영을 위한 희망의 장소라는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DMZ의 브랜드 가치를 최대한도로 제고하면서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야 함. DMZ가 남북한을 넘어 인류 전체의 소중한 문화자산임을 강조하고 동서 DMZ 전체를 하나의 벨트이자 연계된 공간으로서 적절한 보존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구현한 인류 평화생태지구로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DMZ 국제지대화 기획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기도,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유명인사의 DMZ 방문을 수시로 추진하고 걷기대회, 마라톤, 자전거대회, 평화학술회의, 평화콘서트, 사진·미술 전시회와 평화영화제 등을 엮어 세계인의 축제로 주목을 끄는 국제 행사를 기획·주관함(이정훈, 이양주, 19).

참고문헌

○ 강원 평화지역군수 5인 (2019), “평화를 준비하는 지자체 ‘철책 걷어내고 희망을 심겠다’,” 『서울신문』 (3월 13일).

○ 경기도-한겨레 공동기획 (2019), “한반도 동서횡단 천리길을 남북공존 ‘평화의 띠’로,” DMZ 현장보고서 6. 평화지대화, 『한겨레』 (9월 15일).

○ 곽창규(외) (2014),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관련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10월)

○ 김범수 (2017), “토지 3694㎢ 이중삼중 규제…민통선 이남 ‘틀’깨고 조정 필요,” 『서울신문』 (9월 15일).

○ 김연철 장관 인터뷰(2019), “금강산 문제 풀리면 ‘원산~설악산’ 잇는 공동관광지대 조성 가능,” 『한겨레』, (11월 6일).

○ 김진영(2019), “독일 통일과 DMZ, 그리고 강원,” 『강원도민일보』, (11월 6일).

○ 김창환 (2019),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한가?,” 2019 DMZ 평화포럼, 『DMZ의 현재와 평화공존의 미래상』 (쉐라톤 서울 팔레스: 통일연구원, 강원대학교, 9월 27일)

○ 박경만 (2019), “한반도 동서횡단 천리길을 남북공존 ‘평화의 띠’로,” 『한겨레』 (11월 2일).
------ (2019), “죽음의 공간이 생태 관광지로 독인은 해냈다,” 『한겨레』 (11월 2일).

○ 박영민 (2019), “DMZ 평화지대화 추진의 조건과 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3권 제1호.

○ 박은진 (2017), “멸종 위기종 천국 DMZ…생태계 활용한 지역 살리기 무궁무진,” 『서울신문』 (9월 15일).

○ 서현진 (2018),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 『호텔앤레스토랑』 (11월8일).

○ 안재노, 이수석 (2019), “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의 의의와 과제,” 『이

슈브리핑』, 통권 150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원선영 (2018), “빨라지는 금강산 수학여행길...역사·문화공간 깨어나는 DMZ,” 『강원일보』 (10월24일).

○ 육동한, 김범수, 박상헌 (2018), “2018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강원도 - 남북관계 발전과 강원도 평화경제 이니셔티브(안),” 제 686호 남북교류협력시리즈 『정책메모』 (강원연구원)

○ 이수행 외 (2019),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정책연구 2019-54 (경기연구원, 12월)

○ 이정훈 (2019), “한국인과 외국인이 본 DMZ의 이미지와 가치,” 『이슈&진단』, No. 385 (경기연구원, 9월 11일).

○ -----, 이양주 (2020), “경기도 DMZ 정책로드맵,”, 정책브리프 2020-01 (경기연구원, 1월)

○ 이효원 (2014),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 1호 (3).

○ 조한범 (2020), “코로나 19와 남북 보건안보공동체,” 『Online Series』, CO 20-04 (통일연구원, 3월 24일).
------ (2019), “DMZ 국제평화지대화의 의의와 추진방안,” 『Online Series』, CO 19-21 (통일연구원).

○ 조한종 (2019), “DMZ 관광·北과 농업 협력생산…양구, 남북교류 전초기지로,” 『서울신문』 (3월5일).

○ 정대진 (2019),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합의와 향후 과제,” 『국가전략』, 제25권 제3호.

○ 최용환 (2018), “DMZ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접경지역통일연구』, 제2권 제2호.

○ 통일교육원 (2010), 『미래를 위해 남겨놓은 과거, DMZ』,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25 (7월 15일).

○ 김민혁 (2020),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역대 정부의 DMZ 정책들,” (통일부, 2월 3일)

○ 황은주 (2020), “DMZ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뉴스매거진21』 (1월 15일) -끝-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51번길 20 세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ejong.org 문 의: public@sejong.org
『세종정책브리프』에 개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세종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